

이명박의 경쟁 교육 강화에 맞선

전교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경쟁교육 강화를 위한 '미친 교육정책'에 저항해 온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와 검찰 고발,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대한 징계 협박 등 전방위적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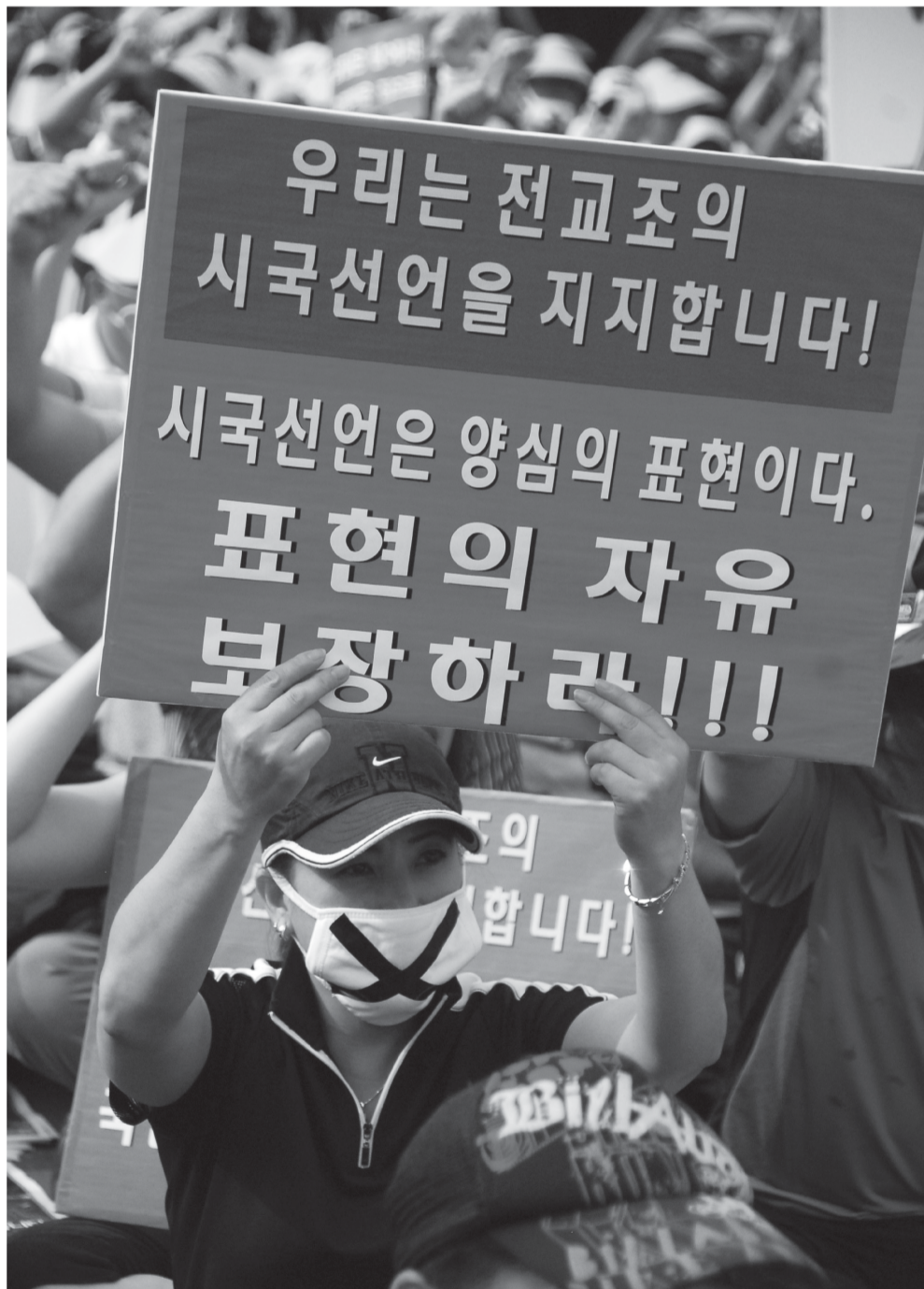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는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게 "복종과 성실의무 등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추진하는 살인적 교육 경쟁체제에 교사들은 '판지' 걸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성실'히 '복종'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과 7월, 정권의 십자포화 탄압 속에서도 2차례나 시국선언을 벌인 교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 역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다.

사실, 전교조는 이미 지난 20여 년간 민주적 권리 침해에 맞서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 온 자랑스런 역사가 있다. 전교조의 창립과 활동 자체가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에 맞선 정치투쟁의 과정이었고 그동안 학교 교육의 민주적 발전은 올곧이 전교조 교사들의 지난한 투쟁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는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징계는 교과부가 선입한 법률가들조차 9명 중 7명이 정당성이 없다고 했을 만큼 공색하기 짝이 없다. 진정으로 "공익에 반하는" 자들은 전교조 교사들이 아니라 이명박과 교과부 장관이다.

일제고사도 대다수 학생과 노동자 서민의 이익에 반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일제고사가 "교육의 질을 높인다"며 정당화 한다. 그러나 일제고사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고착화 하면서 "학력 신장은커녕, 교육 효과도 없이" 학생들을 시험 치르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있다. 전국의 250개 시·군·구와 학교가 1등부터 꼴등까지 공개되면, 모든 학교에서 암기식 경쟁교육이 강화되고, 공교육의 시장화가 고착화 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하며 성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부유층 자녀들의 학교 실패 현상이 생기



고, 그들이 몰린 학교에 정부 재정지원이 편중되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집 자녀들은 보통 수준의 교육 혜택에서조차 배제될 것이다.

따라서 일제고사를 추진하는 교과부가 최근 "맞춤식 교수학습 활동", "학습결손 책임 지도", "학력격차 해소" 운운하는 것은 완전한 사기다. 지옥 같은 입시경쟁과 사교육비만 증가시키는 일제고사는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단위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도 거부하는 등의 모범과 희망을 보여 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오는 13일부터 치러질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현행 법률에 따라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법률에 얽매이거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행동을 호소하고 조직하는 게 필요한 데 말이다.

공교육 무너뜨리기

공교육제도를 무너뜨리고 경쟁 위주의 교육 시장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교사들 간의 경쟁도 심화시키려고 교원평가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교과부는 교

원평가제가 "교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성과급·승진과 연계된 교원평가제 도입은 전교조 '죽이기'와 교사 구조 조정을 추진하며 교사들이 학생들을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도록 압박하는 수단일뿐이다. 그 점에서 일부 진보진영과 <한겨레> 등조차 '전교조가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정말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급당 교원의 수를 늘리고,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질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교육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교육 재정을 늘려야 하지 않는가!

이명박의 미친 교육정책에 맞선 전교조의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학교 민주화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광범한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명박의 교원평가제에 적극적으로 분변히 반대하면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참교육을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열망을 반영한 대안적 진보적 교사 평가 방식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이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맞선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미 전교조도 검토한 바 있는 스웨덴, 핀란드 등의 사례를 모델로 한, 구조조정과 무관하고 학생들을 학교운영과 평가의 주체로 인정하는 민주적인 교사평가제를 제기하면서 반교육적이기만한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폭로하며 강력한 연대 투쟁을 호소해야 한다.

일제고사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미친 교육정책의 핵심인 교원평가제도 반드시 막아내야 하며 이를 위한 전교조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전교조의 투쟁은 전체 학생과 보통의 노동자 서민 학부모들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체 운동진영이 이명박의 전교조 탄압에 맞서 연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을 비롯한 전체 운동진영이 전교조의 투쟁에 함께해서 이명박의 경쟁교육 강화를 위한 정신 나간 교육정책을 저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역행하는 시국선언 탄압 중단하라!

김성보 경수중학교 교사

취임 후 1년 동안 최악의 지지율 속에서 허덕이던 이명박이 최근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말을 쏟아 내며 따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반민주·친재벌·삼질 정치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얼마 전 인사 청문회에서 또 다시 확인된 것처럼 이명박의 '범법자·강부자 내각'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오뎅 사먹고, 빵튀기 팔아 주라면서 실제로는 노동자 서민을 우롱하는 '말로만 친서민 중도' 정책에 구 역질이 날뿐이다.

지난 6월 18일, 1만7천여 명의 교사들이 '민주주의 수호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그 후 교과부는 전교조 조합원 88명을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복종, 품위 유지 의무와 집단행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조차 내부 문건에서 고백하듯이 시국선언 탄압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궁색하고 파렴치한 짓이다. 검찰은 꼭 성도착증 환자처럼 전교조 간부의 메일을 뒤지더니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계좌추적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전교조의 시국선언 내용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은 지극히 정당한 내용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1차 시국선언 내용-

1. 이명박 대통령은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1.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1.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1.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1.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 인권 보장 강화하라.

시국선언은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선생님들에게까지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 협박에도 불구하고 7월 19일, 비조합원을 포함해 2만8천6백여 명의 선생님들이 '표현의 자유 수호 2차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전교조 위원장 파면을

비롯해 해임 21명, 정직 67명이라는 '대학살'을 자행했다. 민주주의와 교육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선언조차 불법화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까지도 자신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국선언을 빌미로 전교조 탄압에 혈안인 것은 경쟁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의 '대운하급 삼질'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함이다. 학생 핸드폰 소지 탄압 시도, 일제고사, 내신대비 방과후학교, 국영수 성적 부진자 색출 방과후 특별 보충, 일제고사 성적 하위 학교에 대한 실력향상 특별 학습 강제, 학급당 학생 수 증가, 학교자율화를 빌미로 교장 권한 확대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탄력성 확대, 교사에 대한 3중 평가(근무평정, 다면평가, 성과급 평가), 자사고 확대와 고교선택제 등은 경쟁 격화, 사교육비 증가, 인성 무시·친재벌, 반서민·반민주·반인권 정책이기도 하다.

전교조가 정권의 극심한 탄압에 시달리는 것은 이명박의 교육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핵심 세력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투쟁은 다수 국민과 학생을 위한 것이다.

이명박의 탄압에 주눅 들거나 위축되지 말고, 참교육 이념을 가슴에 품고, 교육비에 등골 휘어지는 학부모들의 염원과 학생들의 맑은 눈빛을 뒷배경 삼아 더 단호하고 과감하게 싸워 나가야 한다.

입시교육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경쟁교육 강화에 맞선 선생님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청소년 다함께 활동가

10월13~14일,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라는 이름으로 일제고사가 또다시 실시된다. 일제고사는 수많은 선생님들을 쫓아냈고, 학생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쓰러져 가는 공교육을 아예 무너뜨리고 있다.

일제고사를 실시해서 학력부진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는 명분은 헛소리임이 이미 십년 전 영국의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영국은 모든 학교에 대해서 일제고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의 성적을 공개했다. 이는 자연히 '성적'이라는 품질로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 할 수 있는 교육의 시장화를 낳



았다. 부유한 학부모들은 좋은 성적을 낸 학교에 자녀들을 보냈으며 가난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쓰러져 가는 학교에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일제고사는 성적을 통해 모든 학교와 학생을 한 줄로 세우고 서열화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

트',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선택제'도 이를 위한 것이다. 이런 경쟁이 수많은 학생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고, 심지어 자살에 이르게 한다. 한국이 청소년 자살율이 높은 이유도 시험, 점수만을 강요하는 '입시지옥' 때문이다.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인성, 창의력을 무시하고 성적을 위한 경쟁으로만 내몰고,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다. 일제고사를 통해서 학교서열화가 이뤄진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바로 대다수의 학생들이다. 소수의 학생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을 때 평범한 학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다.(그 소수의 학생들도 '입시지옥'에서 고통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원하는 교육은 경쟁, 암기, 문제풀이가 아니다. 경쟁하지 않고 서로 협동하며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인간적인 교육이다. 일제고사처럼 획일적으로 시험과 점수로 청소년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

이명박의 미친 교육정책에 맞서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애쓰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우는 선생님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